

“법대로 연다”... 민주, 개원국회 강행

김태년 “법 어기고 흥정하던 잘못된 관행 청산” 조정식 “국회법대로 5일 국회 문 여는 것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2일 미래통합당을 뺀 여야 정당 소속 의원 공동 명의로 6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개원(開院)국회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경제 악화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명분삼아 통합당에 전방위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첫 번째 의원총회가 끝난 후 곧바로 일하는 국회에 동의하는 제정당과 함께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일하는 국회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결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협치로 둔갑하고 법의 뒤에서 흥정하는 것이 정치인양 포장되던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청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의 근본을 바로 세운다는 비장한 각오로 법이 정한 날짜에 국회를 열겠다”며 “미래통합당도 더이상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매달리지 말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일에 조건없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문재인 뉴딜’과 관련하여 “국가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문재인

뉴딜이 뉴딜답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의 뒷받침과 창의적인 발상이 요구된다”며 “특히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은 혁신경제로의 전환과 함께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만큼 과감하고 선제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21대 국회의 과거의 그릇된 관행을 혁파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5일 국회 문을 여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조 의장은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365일 일하는 국회, 국민국복에 앞장서는 국회, 총선 민의에 부합하는 국회가 되도록 법정시한 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통합당도 민심을 무겁게 받들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조 의장은 또한 3차 추경 재원과 관련, “당정은 강도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할 것이나 지출삭감을 통한 재원 조달에는 한계가 있다”며 “일정 수준의 국채를 조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더욱이 대한민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3차 추경에 국채를 발행해도 주요국가에 비해 안정적”이라며 “우리 경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할 충분한 양적, 질적 기반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산국복이 최우선 과제이며 재정은 위기탈출의 핵심적 수단”이라며 “민주당은 조속히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짓고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최단기간 내에 처리할 것이다. 통합당의 대응적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뉴시스



민주, 21대 국회 첫 의원총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백악관, G7 회의 확대 개최 논의

문 대통령 “트럼프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 방역·경제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일 할 것” 한국, 주요 선진국 대일 합류로 영향력 확대 기대

미국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통화에서 연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확대 개최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드 디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다”며 “두 정상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세계 경제의 힘 복원을 포함해 다양한 경제 및 국가안보 이슈들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올해 말 G7 소집에 관한 진전 역시 논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번 통화에서 G7 확대 정상회의의 개최에 관해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라며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언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G7이 낡은 체제로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를 G11이나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고 표명했다. /뉴시스

G7 체제 참여는 한국이 주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다는 의미인 만큼 국제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기회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감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미국과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무역 문제로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G7 확대에 대중 경제 전선을 짜려 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현재의 G7(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은 ‘구식’이라고 지적하면서 올해 정상회의에 한국과 러시아, 인도, 호주를 초청하고 싶다고 밝혔다. 다만 G7 모임 자체를 확대하겠다는 것인지 이들 나라를 참가국(옵서버)으로 일회성 초청을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올해 G7 정상회의의 의장국인 미국은 회원국 이외의 나라를 옵서버로 초청할 자격을 갖고 있다. 정식 회원국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기존 구성원들 사이 동의가 있어야 한다. /뉴시스

민주 정읍고창지역위, 시·군의회 후반기 원 구성 후보 접수

정읍시의회 의원 6명·고창군의회 의원 3명 등록 29일 후보 선출... 지방의회 후반기 내달부터 시작 윤준병 국회의원 “당 경선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

제8대 정읍시의회와 고창군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가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경선 후보를 접수한 결과, 의장 후보로 정읍은 6명, 고창은 3명이 등록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회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원 구성으로 도덕성과 투명성 등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당내 경선이라는 민주적 절차로 의장단 후보를 선출

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접수 현황을 보면, 정읍시의회는 의장 6명(고경운, 김재오, 박일, 이복형, 조상중, 최낙산 의원), 부의장 1명(황혜숙 의원), 운영위원장 2명(기사재, 이남희 의원), 자치행정위원장 2명(이상길, 정상섭 의원), 경제산업위원장 1명(정상철 의원)이 후보 등록을 하였고, 고창군의회는 의장 3명(이봉희, 조민규, 최인규 의원), 부의장 1명(임정호 의원), 운영위원장 1명(이경신 의

원), 자치행정위원장 2명(김미란, 김영호 의원), 산업건설위원장 1명(차남준 의원)이 후보 등록을 하였다.

접수 마감 이후 윤준병 국회의원은 “정읍시의회 의장에 민주당 의원 절반인 6명이나 후보 등록한 점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한다”며, “선거관리위원장으로 6월 29일 전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장 등의 직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등록한 후보들은 접수 이후부터 선거운동기간을 시작, 6월 29일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지방의회의 후반기는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민주.정의·열린민주 등과 국회 소집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오는 5일 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개최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2일 오후 국회 본청 의사과에 ‘제279회 국회(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소집요구서에는 민주당 의원 177명과 정의당 의원 6명, 열린민주당 3명 및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5개 정당에서 총 188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법정 개원 시일인 5일 첫 임시회를 열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뉴시스

최강욱, ‘한명숙 재판’ 위증교사 수사 촉구

“공수처 수사 대상”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2일 검찰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자신의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재판에 출석했다가 기자회견장에 45분가량 늦게 참석한 최 대표는 한 전 총리 재판 검찰 측 증인들의 폭로가 나오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재조사가 아니고, 새로 드러나고 있는 범죄사실에 대해 당장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시 검찰의 회유에 넘어가서 위증에 가담했던 두 분 중 한 분도 양심선언을 하고 법무부에 진정을 제기한 상황”이라며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절대 외면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신속한 수사 지시는 이런 것에 필요한 것이다. 난데없이 윤

미향을 지목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최 대표는 “이 문제는 일단 법무부와 검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푸는 것이 우선이고, 검찰은 자기반성과 성찰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본인들의 과오가 있다면 낱말이 밝히고, 국민에 대한 사회적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검찰이 민의에 그러한 업무를 소홀히 한다면, 범죄 당사자가 검찰과 검사·수사관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그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등 여러 수단 통해 강제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수처를 신속하게 출범하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 캠페인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 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자료: 질병관리본부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하지 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